

월요광장

문화공간으로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승권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여건과 시민의 식 그리고 삶의 질 등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은 창의산업을 육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조한다.

문화의 측면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여가' 부분에 집중되었다. 광주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도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권 서울도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 서울공

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사정이 이러하데, 지방도시인 광주의 사정은 물론 가지이다.

인류문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도 도시화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시화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주거문화를 거부할 수 없다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이 공간으로써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적인 도시건설에서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서구의 도시들은 문화시설을 도시의 열린 공간과 연계함으로써 문화시설을 도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었다. 서구의 도시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과 더불어 소통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균형 잡힌 도시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의 광장과 공원은 대표적인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열린 공간과 연계되어야 한다. 전당은 광주의 열린 공간을 수용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 도시재개발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

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도 전당이나 열린 공간과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시설과 열린 공간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봉사할 때 문화시설의 존재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9월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창의도시 광주의 중심이다. 그러나 전당의 개관만으로 창의도시 광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당의 개관은 창의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시발점일 뿐이다. 전당이 광주의 열린 공간과 연계될 때 문화시설로서 전당의 기능은 배가될 것이고 창의도시 광주의 문화발전소로 작동할 것이다.

전당의 중요성은 전당의 장소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당이 광주를 상징하는 공간에 세워진 것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도시 공간을 지배하는 핵심 공간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문화가 도시 발전의 중추적 기제로 작동하려면 문화시설은 도시의 상징 공간, 도시의 핵심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전당이 들어선 곳은 창의도시 광주에 걸 맞는 최적의 입지인 셈이다.

도시에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상업공

간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도시 광주의 중심은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이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알스테르담, 베네타 등지에서도 도시의 핵심 공간은 역사문화시설이다. 이들 도시의 명성과 가치가 역사문화시설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문화도시에서 문화시설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한다. 이 말은 문화시설이 공공성을 띠고 공공재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공공성을 띤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화시설이 공공성을 띤다는 것은 문화시설이 도시의 다른 공간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은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끝으로, 문화도시의 시민은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문화 활동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식이 시민의 문화 해독력(culture literacy)을 높이고 문화도시의 경쟁력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문화해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법조칼럼

대포통장의 덫



오수빈
광주지법 판사

몇년전군법무관으로근무할 때의 일이다. 어떤 병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고, 그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입건된 병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중국이거나 가입자 명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피해자들이 입급한 돈이 당초 예금계좌를 개설

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여러 장소에서 인출되어서 단순히 사기 범행에 그 병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평범한 생활을 하여 오던 그 병사가 과연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안을 살펴보니 그 병사는 임대 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가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출 문의를 하였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새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주었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만 받고 남겨주었던 통장 등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병사는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의 범인으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상당 기

간 조사를 받아 억울하고, 은행거래도 정지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소연하였다.

위 사건처럼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받으려는 생각으로 타인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는 경우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수사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도·대여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현금인출기 거래가 가능한 예금통장, 현금인출카드,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상대방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2015년 1월 20일 개정·시행된 전

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여 범 개정 전과는 달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A상사, B기획 등의 상호를 내세워 버젓이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을 사고팔며 대여받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인 해소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약속받은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사기범행의 피의자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유의하기 바란다.

社說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 이대로 가도 좋은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재산이 그것게 공개됐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6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선 공개 대상자의 57.1%인 16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시장·군수 22명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한 단체장은 14명이나 됐다.

이들의 재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제 불황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문제는 겉으로 공개된 재산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직계 존비속 재산의 고지(告知) 위반에도 상당수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1983년 재산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3년 재산

공개 제도로 확대되면서 고지 거부는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명분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사생활 보호였다. 하지만 고지 거부는 공직자윤리법이 지향하는 청렴과 신뢰에 역행한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은 사생활 보호에 앞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같다. 재산공개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후 재산 검증 작업도 필요하다.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한 목록이 나 검수와 일치하기만 하면 재산 증감 과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넘어가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구체적인 검증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고 있는 불성실 신고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축소 신고를 해 놓고도 '실수로 빠뜨렸다' '몰랐다' 등의 해명으로 은근 슬쩍 넘어가도록해서는 안 된다.

‘세림이법’ 무색케한 어린이 통학버스 참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이 세림이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안 도로에서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윤모씨가 급제동하면서 보육교사에게 안겨 있던 A(2)군이 엔진룸 모서리에 머리를 다친 뒤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다. 보육교사 등은 경찰에서 A군이 보채는 것을 달래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윤씨는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주행에 불편을 겪자 역주행을 시도하다 다른 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했다고 한다.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과 보육교사의 부주의가 화를 부른 것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총복 청주

에서 김세림(당시 3살)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자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성인 보호자 1명이 동승해 승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제도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어른들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학버스는 경찰에 등록된 차량이고, 운전기사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까지 이수했지만 사망사고를 자초해 교육 자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보육교사 등에게 엄히 죄를 물어야 하며, 법이 사문화(死文化)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00년 8월 초, 영국과 독일·프랑스·미국·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 등 8개 국 연합군의 진격에 놀란 서태우가 서안으로 도망가자 북경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 당시 연합군 사령부는 과거의 전례를 모방해 '문명의 이름으로 3일간의 약탈을 허가한다'는 비문명적 지침을 내렸고, 북경은 약탈과 방화, 살인, 강간이 목시적으로 허용된 이수라장으로 변했다.

연합군은 위로는 고위 장성에서부터 아래로는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 전리품 포획에 열을 올렸으며, 청나라 관공

을 거리낌없이 드나들던 외국인들은 화려한 옥좌에 앉아 황제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기념사진을 찍곤 했다.

지난 2009년 열린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자금성의 정원인 원명원에 설치됐다 분실된 쥐와 토끼 청동상이 때물로 나왔는데 이들 역시 약탈당한 것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대리인을 통해 이 유물을 낙찰받아 중국으로 옮겨간 뒤 "약탈당한 것이므로 경매 대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심각한 외교분쟁으로

비화됐던 이 사건은 강력한 'G2'로 부상한 중국의 눈치를 본 프랑스의 사과로 결국 유물은

본 주인의 품에 돌아갔다. 중국의 예처럼 전세계에서 공식·비공식으로 거래되는 문화재는 거의 대부분이 전장에서 약탈당한 것들이다. 우리의 문화재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으로 유출돼 시애틀에서부터는 자금성도 약탈자들의 사냥터로 변해버렸다.

소장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 반환 절차를 거쳐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꿈에도 고교를 그럴 또 다른 약탈 문화재들을 되찾으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약탈 문화재

연합군이 지키고 있던 자금성은 처음엔 파괴와 약탈은 모면하는 듯했다. 하지만, 연합군 총사령관 발더제 백작이 서태우가 거쳐했던 궁을 숙소로 사용하면서부터는 자금성도 약탈자들의 사냥터로 변해버렸다. 자금성 내 최대 공연장이었던 창을 각의 경우 경극을 공연하기 위한 무대 의상은 물론, 비치되어 있던 악기와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약탈당하는 바람에 건물이 텅텅 비어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점령지인 자금성

년 내내 안정된 가격이 유지될 것이며, 고용창출과 국민건강까지 네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수험도 마찬가지다. 어떤 제주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어족 자원은 많으나 근해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한다. 어촌마다 물고기 산란기에 제주도 방안으로'검잠가'라는 촘촘한 그물을 쳐서 치어들까지 마구 잡아, 치어들은 갈아서 양식 물고기 먹이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은 있으나 철저히 감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해녀들이 깊은 바다에서 자생하는 미역 다시마 톳 같은 자연산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깊은 바다의 해조는 물고기들의 먹이이자 산란하는 안식처인데, 그것들이 사라져 바다 속에 백화현상이 일어나 고기들이 먹이와 산란처를 찾아 헤매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쓰레기인 플라스틱 끈 등에 산란을 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을 교육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개선해나가는 것이 수협만의 일인 것이다. 산란조합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공단체인 만큼 눈에 보이는 이득을 좇아 금융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조합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에게 바란다

하겠다.'아니면'바뀌! 바뀌!'등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뿐이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선거부터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역시 비록 문자메시지라 하더라도 선거기간동안 매일 별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지 말고, 조합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었으면 한다.

농협의 예를 들어보자. 보통 사람들은 농협이 하는 일은 주로 농협은행을 운영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농협들이 실제로 손쉬운 금융업과 돈을 불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업은 원래 농협의 목적 중 에서 극히 일부밖에 해당한다.

농협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 농업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하고, 둘째로는 날로 변해가는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농업자본의 지원을 위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하고, 네 번째로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생활에도 힘쓰는 것, 또 다섯 번째는 도농 교류를 통해 농산물 판로개척과 도시민들과의 소통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일이다. 여섯 번째로 농업인들의 권

익보호를 위해서도 힘써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공헌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몇몇 농협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농협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농민들이 농협에 바라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일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농사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요즈음은 농가계의 보급으로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는 제대로 된 농산물을 수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팔려고 해도 제값은 고사하고 투자한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잉생산이나 자연재해 또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수요 공급 조절이 안 될 때, 농협이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농협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예를 들어 무나 배추 양배추 등의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면 밭에서 그대로 갈아 엍는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협동조합이 저온창고를 만들고, 농한기를 이용하거나 도시 휴식자들을 이용하여 야채나 과일을 팔리거나 즙을 내거나 또는 가공하여 저장 판매한다면, 힘들어 지은 농산물의 허실도 없을 것이고, 1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별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